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THE NEWSLETTER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https://www.keas1967.com/>) / 발행인 김병주 / 편집인 고장완 / 편집팀 구성우, 권혁기, 박명현 / E-mail keas1967@daum.net
주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9층 902호(도화동, 마스터스타워빌딩)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https://www.keas1967.com/>)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경제적 가치와 파급효과

고 장 완 | 성균관대학교

지역대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지나서 아예 지역사회와 대학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지원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최근 들어 정부가 지역대학 시대를 외치고 지역대학들에게 정부의 예산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대학 전성시대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말이 지역대학 시대이지 사실은 지역대학이 위기인 시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역대학이 체감하는 생존에 대한 인식은 어느때보다 크게 느껴진다. 지역대학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오래되었고 지역대학이 사라지면 지역경제가 몰락한다는 이야기도 오래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지역사회도 살리고 지역대학도 살리는 방안을 오랫동안 모색하여 왔다. 그러한 다양한 시도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는지, 이제는 새로운 정책 시도으로써 RISE나 글로벌 사업 등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 본다. 복잡한 정치적 논의나 대학 외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우선 대학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논의보다는 우선 개선이 가능한 사안부터 논의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지역대학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일면서 지역대학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을 지원해 달라는 혹은 지원해야 한다는 호소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회자 될 때마다, 늘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것은 지역대학들이 재정지원을 호소하면서도 자신들의 대학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접하고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지역대학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다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대학의 가치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적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다. 한 지역의 대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그 대학이 한국 사회에 혹은 해당 지역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 파급효과나 경제적 생산효과를

주고 있는지 눈에 보이게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즉 그 대학이 존재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이득을 주는지를 제시한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학이 산출한 사회·경제적 이득과 재정지원 투자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정책결정을 할 것이다. 파급효과가 적거나 투자효과가 적다면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고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면 당연히 투자가치를 느낄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지역대학에 대한 논의가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문제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면서 대학 교육의 이득이나 파급효과를 다루는 논의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짧게나마 지역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특히 경제적 가치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물론 대학의 가치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경제적 가치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다만 현 상황에서 볼 때 대학의 경제적 가치 논의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대학의 경제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

지역대학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다양할 수 있으나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대학의 경제적 가치, 혹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역대학이 존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알게 모르게 얻고 있는 경제적 이익은 어느 정도인가, 아니면 반대로 지역대학이 사라지면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받을까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시점에서 볼 때 두 가지 이유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로, 대학은 그 존재 이유를 구체적인 현황과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시 더 이상 감정적이거나 막연한 호소로 정부를,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학이 앞으로 상대해야 할 대상은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학은 지방정부에게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어떠한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또 손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대학이 지역사회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외부로부터의 요구이다. 지역사회와 대학과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고등교육투자 근거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로 평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기여도의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영인 외, 2021: 209)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지역대학은 이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가의 도입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기대되는 이익이나 효과가 투자한 비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 될 때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역대학은 자신들의 대학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지역대학의 경제적 파급 효과 측정

그러면 지역대학들이 자신들의 대학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대로 이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만, 이 짧은 시론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측정 방법이나 절차를 언급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어떠한 내용이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본다.

대학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대학 자체가 하나의 기업으로써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직간접적 재정 지출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살펴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학이 배출한 인력이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대학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거나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지식을 전이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의 사례(Appleseed, 2015)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 자체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자. 대학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업(University as an enterprise)이다. 대학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구성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운영을 위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설설비를 확보하고 또 건물을 새로 짓거나 확충한다. 또 이러한 직접 효과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유발효과들이 있다. 게다가 학생들이 소비하는 비용도 있고 외부 사람들이 대학을 방문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얻는 직·간접적 이익도 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에 대하여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나 다른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면 대학 자체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 수 있다. 미국의 뉴욕대학은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경제적 측정을 통하여 대학 자체가 뉴욕시(New York City)에 유발하는 총 경제적 가치를 고용창출효과 26,443명, 임금효과 약 16.4억 달러, 생산유발효과 29.0억 달러로 추정(2013년 기준)하였다. 물론 뉴욕 주(New York State)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뉴욕시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관련한 효과이다. 이는 교육투자로 배출된 인력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고등학교 교육만을 받은 사람보다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뉴욕시의 경우 2012년에 대졸자의 평균임금은 52,870 달러이고 고졸자의 평균임금은 26,677 달러로 나타나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거의 2배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졸업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때마다 일인당 GDP가 약 17.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oss de Vol et al., 2013).

마지막으로 대학의 연구활동은 그 자체로서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지식의 전이(Research and knowledge transfer)를 통해서도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대학은 다양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대학마다 연구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연구활동은 고용효과와 함께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지식이나 기술의 전이, 또는 창업을 함으로써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기술이전에 따라 특허비, 창업에 따른 매출 효과, 연구와 창업에 투입된 인력 등은 화폐적 가치로 산출할 수 있고, 기술이전 건수나 창업 혹은 벤처기업수, 특허수 등은 비화폐적 가치로 나타낼 수 있다. 뉴욕대학의 경우는 2013년에 직접 수입이 130만 달러, 특허신청건이 37개, 특허를 받은 특허수가 19개, 창업이 5개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대학의 현재적 관심을 반영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대학의 경제적 가치와 파급효과를 논의하면서 이에 대한 외국 사례를 소개하였다(서영인 외, 2021). 이 보고서에 나온 여러 사례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립대학시스템(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 CSU)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시스템(CSU)의 경우 지역 산업활동 파급은 269억 달러, 노동소득 파급은 103억 달러로 이는 캘리포니아 주가 CSU에 배정한 2018-19년 지원금 38억 5천만 달러의 약 6.9배와 2.7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고용파급 효과는 연간 총 209,3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주 및 지방정부의 세금수입은 16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 CSU와 학생들이 지출한 1달러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경제활동 시 1.54달러만큼 투자수익을 창출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대학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가치나 자신들의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명하고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정책결정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대학의 효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학들, 특히 지역대학들도 자신들의 경제적 가치나 자신들의 대학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기 쉽고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글을 맺으며

대학의 가치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다만 이 글에서 대학의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둔 것은 현재의 한국 고등교육 상황을 고려하고 특히 지역대학이 택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즉 지역대학의 경제적 기여나 파급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결정자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자신들 대학의 존재 이유나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제 대학은 지역사회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라이즈(RISE)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 지방자치단체가 제한된 예산으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져야 한다. 이를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대학의 경제적 가치나 파급효과를 계산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대학이 이 정도의 경제적 기여나 파급효과를 가져와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다 보상해주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경제적 기여나 파급효과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모델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학의 경제적 가치나 파급효과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따라, 그리고 인구학적 조건이나 사회학적 여건, 경제적 상황 등 고려하는 변인들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개별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의 존재 여부나 신뢰로운 데이터의 확보는 측정의 정확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 대학의 일반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에 적용될 수 있는 체계적 분석 모델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대학은 자신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보도자료 (2023. 3. 8).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본격 시동.

서영인 외 (2021).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Appleseed (2015). The Economic Impact of New York University.

Ross de Vol et al. (2013). A Matter of Degrees: The Effect of Educational Attainment on Regional Economic Prosperity. The Milken Institute.



| 시론 |

지역주도 고등교육 체계로의 전환과 우리의 역할

주 회 정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 센터장

인서울(In-Seoul)의 꿈은 뜨겁고도 무겁다. 서울(에 있는)대학을 향한 청소년기의 당찬 포부는 벽찬 인생 속제로 남아 끝이 없다. 수도권 대학에 들어가, 서울에 있는 직장을 구하고, 강남에서 사는 것이 성공 공식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면서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외국학자는 대한민국은 ‘인구소멸국가 1호’가 되리라 전망한 바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악재에 더해 수도권 일극화 현상으로 지방의 위기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어 “Korea is so screwed. Wow!” (대한민국 완전 망했네요) mim을 흘려듣기에는 어쩐지 석연치가 않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10년 내 닥칠 국가적 위기는 짐짓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최근 대학 미충원의 2/3는 지방대학에서 발생했다. 지방대학이 먼저 위기를 맞은 데는 인구사회적 배경 외에도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시행된 고등교육 정책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의학학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나 수도권 정원 규제와 같은 수도권 쏠림 억제책은 진학 기회의 희소가치를 높여 오히려 풍선효과를 낳았다. 우수 인재 ‘육성’이 아닌 ‘분산’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사실상 수도권 집중화를 막지 못했다. 또, 지역은 중앙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부처 사업의 대리인으로 머물러 내생적 지역발전을 꾀할 동력을 얻지 못했다.

지역혁신의 핵심 기관인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현 정부는 올해 2월, 2025년부터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체계 도입을 발표하며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격 예고했다. 중앙정부는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고등·평생특별회계법 통과로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정부와 공동설계(co-design)를 통해 지역별 대학지원 체계 구축에 돌입했다.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3개 지방자치단체가 RISE 시범지역 선정 공모에 신청서를 내며, 지역대학 살리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고등교육 부문의 분권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RISE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기획에서 벗어나 지역과 대학의 여건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할 정책의 창이 열렸다. 지방대육성법, 지방 조례 등 수정, 보완, 규제 완화가 필요한 제도도 많고 실질적인 분권화를 뒷받침할 지방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정한 배분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거버넌스는 참여자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전제로 공공의 의사결정과 집행의 효율·효과성을 높여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추진하기에 유용하다. 따라서 짧은 시행 준비 기간 동안 지역별 고등교육 거버넌스 토대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지역 고등교육 거버넌스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핵심 조정·관리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고등교육 관련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은 구체성이 낮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담율은 5%에 못미치고 있다. 또, 일반행정기관과 다른 대학에 대한 이해 부족의 우려도 있다. 우리 교육행정학계는 교육자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의 협력 부문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중앙과 지방정부, 대학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계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시론 |

개별대학 주도의 성과관리 체제 구축: 무엇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는가?

박 수 미 | 건국대학교, 교육성과관리센터장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에 대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는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6항 및 제2조제1항). 성과관리는 이처럼 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그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결과 중심 평가로서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와 성과지표에 따른 결과 관리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를 보면 이러한 성과관리 개념이 정부 업무평가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학평가는 대학들이 학생 유치에 관한 별도의 노력 없이도 입학생이 넘쳐나던 1980년대까지 대학 교육의 단일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자구책으로 도입되어 지속적인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헌법 이념과 조항에 따라 대학평가는 대학 간 자율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종합평가(1982~1992)를 시작으로 대학종합평가인정(1994~2006), 대학기관평가인증제(2011~2025)로 변화되어 왔다. 현재 시행 중인 대학기관평가인정 인증 평가지표를 보면, 대학 이념 및 경영으로부터 대학 성과 및 사회적 책무까지 성과관리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 그러나 대학교육협의회 중심의 자율 평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대학종합평가 도입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신재철, 2004). 회의적인 주장의 대표적인 근거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평가 외에도 교육부의 재정지원평가, 언론사의 평가 등 대학 평가 기구가 일원화되지 않고 다양하며 교육부 재정지원평가에 비해 혜택과 지원이 없는 점,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과 정리, 교육 및 연구 활동에의 지장, 행·재정적 부담과 평가로 인한 전국 대학의 획일화 가능성이었다. 특히, 2015년 이후에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구조 개혁 조치로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하면서 이러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한 대학 자율 평가의 실효성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더불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별대학이 주체가 되는 평가”는 외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평가로서의 의미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근간으로 해서 작년부터는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이 본격화되었다. 대학의 설립·운영의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개편하고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해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교육부 보도자료, 2022. 12. 16.). 최근에는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통해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 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전공 선택권도 확대하여 1학년 전과 및 신설 학과로의 전과를 허용, 산업 변화에 발맞추어 융합 전공의 신설과 폐지 가능,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과 선발 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교육부 보도자료, 2023. 06. 28.). 정부가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여러 가지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대학은 각종 재정지원평가, 언론사 평가, 대학교육협의회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개별대학이 처한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제를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 오던 학령인구의 감소, 취업시장의 악화, 대학의 국제경쟁 심화, 인공지능기술의 고도화, 코로나19로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확대 등 대학이 처한 환경은 개별대학의 성과관리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 성과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경영 및 교육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정보공개와 접근성 향상을 통해 대학 내·외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향후 규제 완화로 인해 모집 전공과 관계없이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사관리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참신하고 새로운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개별대학 주도의 성과관리 체제 구축이 쟁점이 되는 것은 아마도 급격한 환경 변화와 규제 완화로 그 실효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미 기존의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대학평가, 대학 간 워크숍 등을 통해 2010년대 이후 꾸준히 선진 사례들이 소개되어 왔으나 아직도 잘 하는 대학이 극히 손에 꼽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최근에 일부 대학들이 성과관리 센터가 있음에도 기관연구(Institute Research; IR) 센터를 중복해서 만들고 있으며, 성과관리 전담 조직을 구축한 경우에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경우가 55%에 불과하고 데이터 거버넌스와 분석 결과 환류에 대한 수준은 더 낮은 결과(이길재, 202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각 대학에서 기획처에 두고 있는 평가성과팀 또는 전략기획팀, 데이터를 관리·운영하는 정보운영팀 등 대학 내 성과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화 전략이 부재한 것을 보더라도 IR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에 대한 대학의 조직 이해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학의 자율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도구로서 안내된 각종 학생 조사의 시행 여부와 활용 방안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조사는 분석과 정책 제언에 의미가 있으며, 특히 학생 대상 조사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학사 데이터와의 통합 분석을 통해 대학의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발 및 제언에 유의미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조사 행위 자체는 큰 의미 없는 것임에도 조사 그 자체에 매몰되어 학생들이 범람하는 조사의 홍수에 빠져 허우적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이의 자립을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라는 말이 있다. 기존에 대학평가 과정에서 안내된 각종 조사 도구가 물고기를 잡는 낚시대였다면, 지금의 대학들은 비싸고 성능 좋은 낚싯대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만 하고 있을 뿐이다. 제공된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는 법은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의 자율 성과관리를 위해 강조되고 있는 IR 또한 자칫 허울 좋은 또 하나의 낚싯대가 되지 않도록 IR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해 먼저 고민할 때이다. 개별대학 주도의 성과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IR 센터장과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대학 내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을 최우선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 성과관리를 위해 “돌쟁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자세”로 대학에 대한 통제적 관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개별대학 주도의 성과관리 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재철(2004), 대학종합평가와 대학발전 : 성과와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2(4), 333-350.

교육부 보도자료, 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일시 2023. 06. 28.)

교육부 보도자료,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본격화
(보도일시 2022. 12. 16.)

한국교육협의회(2023), 대학기관평가인증. <http://www.kcue.or.kr/index.htm>(검색일 2023. 09. 15.)

이길재(2023), 대학 자율 성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IR의 과제, 한국대학IR협의회(KAIR) 하계 포럼, 대학 성과관리
조직의 현황과 과제(pp. 219-236). 인천: 한국대학IR협의회·한국고등교육학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
연구소.

• 2023년 학회주요소식 •

1. 51대 사무국 소개

한국교육행정학회		홈페이지: http://www.keas1967.com/ E-Mail: keas1967@daum.net
학회	주소	(0417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마스터즈타워빌딩) 9층 902호
사무국장	성명	구성우(신한대학교, keas1967@daum.net)
간사	성명	총무간사: 권혁기(영남대학교) - 업무: 학회 및 학술대회 총괄업무 - keas1967@daum.net , 010-9685-9858
		총무부간사: 박명현(영남대학교) - 업무: 회원 및 회비 납부관리, 홈페이지 관리, 사업수주 행정관련 업무 - keas1967@daum.net , 010-8869-2996
		편집간사: 신원규(공주대학교) - 업무: 교육행정학연구 투고 및 발간 관련 업무 - keas1967@nate.com , 010-6754-8687
		편집부간사: 신윤미(공주대학교) - 업무: 교육행정학 연구 투고 및 발간 업무 지원, 게재료 납부 확인 - keas1967@nate.com , 010-4097-6507

2. 학술지발행

「교육행정학연구학술지」 발행일정

교육행정학연구(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는 사회과학분야의 등재학술지입니다. 2004년 이래 등재학술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접수)하고 있으니, 연구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권호	접수 마감일	발간 예정일
41권	1호	2023년 02월 28일
	2호	2023년 04월 30일
	3호	2023년 06월 30일
	4호	2023년 08월 31일
	5호	2023년 10월 31일

문의 : 신원규 편집간사 (010-6754-8687 / keas1967@nate.com)

「교육행정학연구」 논문투고 및 인용 활성화 요청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발행되는 ‘교육행정학연구’는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꾸준히 교육행정 전반의 깊이 있는 연구로 한국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등재학술지 계속 평가와 관련하여 논문의 투고율과 인용지수가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어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논문 투고와 KCI 논문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 KCI 인용지수는 재단 우수등재, 등재, 등재후보 학술지 간의 인용된 횟수만을 가지고 산출된 지수으로써, 해외 학술지에 인용된 횟수는 포함되지 않음.

※ 논문의 저자가 피인용문헌을 기재할 때,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권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KCI 인용지수 산출시 누락될 수 있음.

3. 교육행정학연구 2022년 KCI논문인용지수 (23년 7월 수신자료)

본 학회의 발간 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가 사회과학(교육학) 분야에서 발간 논문수와 더불어 KCI 영향력지수 등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대분류	중분류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논문수 2020 + 2021	피인용 횟수	KCI 영향력 지수	KCI 중심성 지수	자기인용 비율(%)
사회과학	교육학	한국교육행정학회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111	253	2.28	2.40	17.8%

4. 회비납부안내

회원님의 연회비 및 이사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학회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회비 납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연회비와 이사회비를 상시 수납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회비 및 이사회비 규정을 참고하시어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목	회비
이사 임원회원 이사회비	100,000원
일반 정회원 연회비 (※ 정년퇴직한 비이사회원은 면제)	50,000원
학생(전일제) 회원 연회비 (※ 전일제 석사과정생에 한정함)	30,000원
기관회원 연회비	100,000원
신규회원 입회비(※ 개인 및 기관 회원 공통)	10,000원

※ 2021년부터 정회원비 3~5회분 선납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5. 정책연구수주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올해 8월까지 총 6개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회 회원님의 정책연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착수~완수)	총 연구비 (간접비)	발주기관
안동시 평생학습원용역	정성수 (대구교대)	2023. 02.28~ 2023.11.02.	37,740,000원 (2,264,400원)	안동시 평생학습원
작은학교지원을위한중장기 방안연구	박수정 (충남대)	2023.04.13.~ 2023.11.09.	29,755,900원 (1,785,354원)	대전광역시 교육청
서대문형 미래교육발전방안 연구용역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04.13.~ 2023.10.08	19,790,000원 (1,187,400원)	서울시 서대문구청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양성과 임용체제 연계 방안 연구	차성현 (전남대)	2023. 07. 18 ~ 2023. 12 .31	40,000,000원 (2,400,000원)	한국 교육개발원
2023 학교교육지원센터 정책연구용역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08. 07 ~ 2023. 10.31	27,242,000원 (1,542,000원)	세종시교육청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사업 발전방향 연구용역	오세희 (인제대학교)	2023. 08. 01 ~ 2024. 01.31	36,000,000원 (1,695,000원)	한국장학재단

6. 학회행사소식

1) 2023년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행정학회 분과세션 운영

- 가. 일시: 2022년 6월 30일 (금) 오전 10시 50분 ~ 18시 20분
 나. 장소: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302호
 다. 참석: 한국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1부	초·중등교육행정1	주제1: 고교학점제 운영과정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김지선, 박세준, 이승호)
		주제2: 질적 메타분석에 대한 연구동향분석: 교육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승호, 황정훈, 박대권)
		주제3: AI시대 교사의 역량에 대한 예비교사의 기대 수준관 인식변화 (한송이, 신하영)
2부	고등교육행정	주제1: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정책에 나타난 지방자치 단체 역할 변화 (신하영, 박소영)
		주제2: 대학의 행정적 팽창: 대학의 직원 수 증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영향 분석 (이진권)
		주제3: 한국 교육정책의 특징 분석 - Cooper 외의 다차원 교육정책 모형을 활용한 연구들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김두섭, 민윤경)
		주제4: 4년제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대학변인 분석: 대기업 취업 가능성을 중심으로 (권혁기, 박명현, 김병주)
3부	초·중등교육행정2	주제1: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기반 교실혁신 정책분석 (김두섭, 이승호)
		주제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의 디딤돌과 걸림돌 (고 전)
		주제3: 한 초등학교 교사의 학교혁신과정 경험에 관한 자문화 기술지표 (김성아)
4부	신진연구자 및 학문후속세대	주제1: 초등학교의 분산적 리더십, 교사 임파워먼트, 학교조직 효과성 간 관계 -LMX에 의한 조건부 과정분석 (국준봉, 이재덕)
		주제2: 교사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한 학업성취 관련 연구에 대한 종합적 고찰 (이평구)
		주제3: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수능제도 정책변동 분석 (전성훈)
		주제4: 학생 주도성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실행연구 -초등학교 학습나침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강동원, 신철균)
		주제5: 국제교육협력 전문가 양성 과정 설계를 위한 모델 연구 (박찬수)



2) 2023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장소 및 일시 안내

- 가. 주제: 지역, 국가와 고등교육 경쟁력 : 전망과 과제
- 나. 일시: 2023년 12월 02일 (토), 09:00 ~ 18:00
- 다. 장소: 충남대학교 글로벌인재양성센터(W15) (충남대 서문 방향)
- 라. 주최: 한국교육행정학회
- 마. 후원 및 지원 : 한국연구재단, 충남대학교 BK21사업단,

3) 2023년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지원사업, 학술지지원사업 선정

한국연구재단의 사업인 국내 ‘학술대회지원사업’ 과 ‘학술지지원사업’ 에 선정되었음을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교육학 분야의 학술연구단체로서 양질의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으로써 교육학과 교육행정학분야의 기여를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4) 2023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제 52대 부회장선거 (2025년도 학회장) 안내

- 가. 일시 : 2023. 10. 31(화) ~ 11. 02(목)
- 나. 자격 : 차기 부회장 투표권은 2023년도 기준, 2년간(2022년도와 2023년도) 연회비 납부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 ※ 연회비 납부 기한: 10월 22일 일요일 24:00까지
 - ※ 2023년도에 신규 가입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의 경우, 투표권이 없음
- 다. 방법 : 추후 이메일 공지 및 안내에 따른 온라인 투표후 개표
- 라. 관리 및 집행 : 한국교육행정학회 부회장선거위원회
-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 회원 동정 및 신간 안내

1) 회원신간안내

〈교육행정학 연구방법론 핸드북〉 박선형 외 공저 / 학지사 / 2023. 07. 30



이 책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학문적 위상과 지식 기반 및 집단 연구력을 대변하는 실천적 연구 성과물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추진되었던 10회 이상의 연구방법론위원회 월별 모임과 20여 명의 발표자 및 15명의 토론자가 참여한 연차학술대회 기획세션 II 연구 결과물 등은 이 책의 출판을 위한 기본 토대로 작용하였다. 제1부는 '교육행정학의 이론화: 과학철학과 연구방법론의 쟁점'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3개 챕터로 구성되었다. 이론발달의 과학철학 쟁점과 연구방법론 논점, 과학적 실재론과 비판적 실재론의 차별적 특징, 가추법과 역행추론 등이 포괄적으로 심층 논의되었다. 제2부는 '양적 연구방법 교육 및 활용 실태와 발전 방향'에 관한 6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 양적 연구방법론 교육 현황과 문제점, 교육연구 질, 교육정책효과, 다층모형, 구조방정식, 준실험 설계 등에 관한 비판적 성찰과 향후 발전 방향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었다. 제3부는 '질적 연구방법 및 혼합연구방법 활용 실태와 발전 방향'을 심층 진단·분석하는 6개 챕터로 구성되었다. 질적 연구 동향과 문제점, 근거이론, 실행연구, 담론분석, 질적 연구자 성찰, 혼합방법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등에 관한 심층 분석과 종합적 논의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6판〉 주삼환 외 공저 / 학지사 / 2023.07.30



저자: 주삼환(충남대학교 명예교수, 본 학회 회장 역임) 신봉섭(나사렛대 교수) 이석열(남서울대 교수) 정일화(충남대학교 강사) 김용남(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이 책은 2000년 3월에 첫 번째 출간하여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5판까지 개정되어 왔다. 이번에 세상에 내놓은 6판은 1-5판에서 설정한 주제들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구성하는 한편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구조를 반영하는 새로운 노력을 하였다. 특히 대표 저자(주삼환)가 교육행정학회를 통해 여러 번 제시한 '교육행정학의 지적 구조(틀)'를 반영하여 교육행정 연구자나 교육행정가들을 위해 2022년에 내놓은 「교육행정학(학지사)」과 연계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예비교사들에게 교육행정과 교육경영의 실천 역량을 기르도록 하였다.

6판에서 보완하거나 새롭게 추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장(교육행정 개설)에서 교육행정의 이론 부분을 줄이고, 교육행정 실체와 교육행정 연구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둘째, '학교조직에서의 인간관계'를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초임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 등과 원활하게 관계 맺기를 하거나 소통하는 방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담았다. 셋째, 기존의 교육정책에 '교육기획'을 추가하여 장을 구성하였다. 넷째, 기존에 교육재정을 다룬 장에서 '학교시설'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장학을 다룬 장에서 '교육과정 행정'을 추가하였다. 이것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책에서 새롭게 시도한 것으로, 교육행정의 본질적 목적에 초점을 둔 것이다.

끝으로, 본 서의 6판을 새롭게 구성하였으나, 그간 (이 책을) 수업의 교재로 지속적으로 활용 해주신 교수자들을 위해 전체 체제의 안정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어떻게 교사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김병찬 저 / 학지사 / 2023.06.30



본 저서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교사리더십을 어떻게 갖추고 발휘할 것인가에 목표를 두고 교사리더십 발휘 모형을 탐색하여 제안하는 책이다. 이 책은 모든 교사로 하여금 교사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사가 되도록 도와주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훌륭한 교사들을 리더로 세워 학교 변화를 이끌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자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또한 현재 학교 현장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만을 위한 책도 아니다. 이 책은 우리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중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교사리더십을 갖춰야 하는 이유와 방향과 전략에 관한 책이다.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50년 역사〉 염민호의 저 / 전남대 50돌 편찬위원회 / 2022.12.01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50년 역사(1972-2022)를 종합적으로 규명하여 정리한 책(ebook 포함)이 출판되었다. 교육학과50돌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염민호 교수)는 학과창설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50년 역사: 사람, 활동, 문화'를 출판했다. 10개 장과 부록 등 총 492쪽 분량으로 구성된 이 책의 집필에는 현직 교수, 동문, 대학원생, 학부생, 조교 등이 참여했다. 이 책 출판에는 17개월이 소요되었는데, 편찬위원회는 6차례의 편집회의를 통해 책의 주제를 선정하고 각 장의 내용을 집단 검토했으며, 출판 전 마지막 단계에서는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동문회 단톡방(270명)에 최종원고를 공유하여 각 장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와 논리구성을 검증받았다.

이 책은 10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교육학과의 학문적 정체성과 50년 동안의 사회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람, 활동, 문화 등을 주제로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사람'에서는 교육학과 전현직 교수 및 대학원생들의 연구성과와 동문들의 사회공헌 내력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활동'에서는 조직으로서 교육학과의 수행한 교육과정의 변화, 교육문제연구소의 성장과정 및 성취, 그리고 교육학과 학생회의 가치와 역할을 다루고 있다. '문화'에서는 교육학과 전현직 교수들이 인식하는 학과 구성원들의 삶, 대학의 변화, 교수-학생 관계, 그리고 개별 동문들이 체험한 대학시절에 대한 단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진'으로 보는 교육학과 50년 역사를 주제로 동문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수집하여 시기별로 소개했는데, 이는 대학과 학과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교육학과 학부 졸업생 명단(833명), 일반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한 석사학위자(218명), 박사학위자(155명)들이 작성한 논문제목을 소개하고 있다.

교육학과50돌기념사업을 총괄한 염민호 교수는 "책 출판을 포함한 기념사업 덕분에 교육학과 구성원 모두가 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 교육학과의 학문적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대학/지역/국가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성찰하고 미래 지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협력작업이 지닌 가치와 효과를 교육학과 구성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2) 회원동정



[양민석]

前) West Texas A&M University에서 조교수 역임

現) 2023. 08. 01 미주리대학교
(University of Missouri) 교육리더십정책학과
(Educational Leadership and Policy Analysis) 조교수 재직



[이슬아]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소장 나민주)
이슬아 전임연구원,
한남대학교 교직부(2023.09.01.자) 소속 전임교원으로 임용



[심현기]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소장 나민주)
심현기 전임연구원,
공주대학교 교육학과(2023.03.01.자) 소속 전임교원으로 임용

8. 2023년 회비납부 명단(2023년 8월 31일 기준)

1) 2020년 5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

구성우, 김병찬, 나민주, 엄문영, 허병기

2) 2023년 신입회원 회비 납부자 명단(55명), (a : 전일제회원, b : 일반정회원)

강동원 강미리 계상충 고은애 김규석 김다은 김성아 김성현 김소현 김수용 김승호 김영준
 김승호a 김승호b 김영준 김정아 김정은 김지현 김진희 김향란 김효은 문혜빈 박가실 박소영
 박연복 박연은 박주혜 백지원 서경숙 서시연 서지희 석은숙 신형석 신 훈 안해연 여홍은
 오승천 오재준 유선영 유진설 이고운 이다현 이선복 이순희 이예서 이지연 이해직 임수아
 장서진 장진원 조민영 조 인 조학연 표정현 한희경 황수민 황현철

2023년 기존회원 회비 납부자 명단(134명), (a : 전일제회원, b : 일반정회원)

강소윤 강은숙 강정은 경미선 고장완 고전 공희정 구지연 국준봉 권수진 권은비 권희청
 김건아 김리나 김무영 김민희 김범주 김병찬 김선이 김용우 김용일 김정희 김제현 김종민
 김지선a 김지선b 김지현 김하얀 김희규 나민주 남인혜 노지영 문영빛 문지영 문찬주 문정미
 민수빈 박다슬 박동찬 박선나 박세준 박소영 박수미 박수아 박수정 박승중 박인심 박지희
 박해경 박혜연 박효원 배정훈 배지혜 백정하 변수연 서재영 서지영 서화정 선미라 손판이
 송경오 송인영 송효준 신재영 신재흡 신하균 신하영 심택형 안현용 엄문영 연 우 엄민호
 오범호 오유진 우선영 유성동 유승민 유종훈 윤세영 윤익상 윤 정 이고은 이길재 이래효
 이문수 이보미 이상규 이상철 이서연 이수민 이수지 이승현a 이승현b 이승호 이영신 이원재
 이유진 이은혜 이인수 이재덕 이진권 이평구 이해니 이해직 이호준 이희숙 임수진 임종현
 장덕호 장우천 전지혜 정광호 정동욱 정설미 정유리 정재균 조민지 조영하 주휘정 차지철
 채재은 최성규 최순환 하동엽 한송이 한지예 함승환 함진숙 허은정 홍창남 황재운 황정훈
 황준성

4) 법인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2명)

윤정일, 고 전

5)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24명)

고장완 김민희 김갑성 나민주 박대권 박수정 반상진 백정하 변기용 서지영 송경오 신재흡
 엄문영 오범호 이길재 이광현 이석열 이인희 이희숙 임수진 주현준 채재은 최순환 함승환

6) 2023년도 기관회원 납부(7)

나이스북, 사학진흥기금, 전라북도교육연구원, 국회도서관

※ 연회비 또는 이사회비를 납부하셨으나 납부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 담당: 총무부간사 박명현 (010-8869-2996, keas1967@daum.net)

8. 제 51대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임원

■ 회장단

- 회 장 : 김병주(영남대)
- 부 회 장 : 김도기(한국교원대)
- 감 사 : 염민호(전남대), 김갑성(한국교원대)

■ 이사회

• 당연직 이사(33명)

신극범	신철순	김명환	남정걸	이형행	윤정일	신중식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송광용	임연기
허병기	이윤식	박세훈	김성열	신현석	주철안	김혜숙	반상진	박남기	고전
박선형	김병주	김도기							

• 선임직 학회이사(66명, 위원 가나다 순)

고장완(성균관대)	김용(한국교원대)	김갑성(한국교원대)	김규태(계명대)	김민조(청주교대)
김민희(대구대)	김병찬(경희대)	김영식(경남대)	김왕준(경인교대)	김이경(중앙대)
김용련(한국외대)	김정희(대교협)	김희규(신라대)	나민주(충북대)	남수경(강원대)
박대권(명지대)	박상완(부산교대)	박소영(숙명여대)	박수정(충남대)	박영숙(KEDI석좌)
박종필(전주교대)	박주형(경인교대)	배상훈(성균관대)	백정하(대교협)	변기용(고려대)
서재영(한남대)	서지영(용인대)	서화정(대구대)	송경오(조선대)	신재흡(한성대)
신정철(서울대)	신철균(강원대)	안선희(중부대)	양성관(건국대)	엄문영(서울대)
엄준용(중부대)	오범호(서울교대)	유길한(진주교대)	윤홍주(춘천교대)	이광현(부산교대)
이길재(충북대)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이동엽(KEDI)	이석열(남서울대)	이성희(KEDI)
이수정(단국대)	이수정(세종대)	이승호(KEDI)	이쌍철(KEDI)	이인희(제주대)
이재덕(한국교원대)	이정기(백석대)	이정미(충북대)	이필남(홍익대)	이희숙(강남대)
임수진(광주교대)	장덕호(상명대)	전제상(공주교대)	정동욱(서울대)	정바울(서울교대)
정성수(대구교대)	정수현(서울교대)	정제영(이화여대)	주현준(대구교대)	차성현(전남대)
최순환(대구한의대)	채재은(가천대)	천세영(충남대 명예)	최정윤(KEDI)	하봉운(경기대)
함승환(한양대)	홍창남(부산대)	황준성(KEDI)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대용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⑧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

